

14강 - 학교폭력 분쟁의 해결

■ 핵심용어(용어사전)

- * 제척 :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 기피 :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 * 회피 :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 사례 :

<사건의 개요>

S고등학교 3학년인 A는 쉬는 시간에 교실 내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반 친구인 B가 지나가면서 A의 책상위에 있던 책을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여 B에게 책을 주워서 책상에 올려놓고 가라고 이야기 하자 B가 자신이 책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B가 교탁 앞으로 가자 따라서 교탁앞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어깨를 밀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B가 갑작스럽게 A의 왼쪽 눈을 치자 그대로 쓰러졌다. 이에 A는 바로 입원을 하였고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B의 부모는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예상외로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A가 B를 상해혐의로 고소하자 B도 A를 상해혐의로 맞고소하였다.

한편 S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 및 B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이때 A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S고등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지도 않고 사안이 중하므로 분쟁해결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S중학교장의 분쟁해결 거절은 정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과 분쟁조정외의 거부나 중지, 종료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사건의 결말>

A 부모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조정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해주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S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전문가의 의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본 학습>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 해결 절차

가. 분쟁조정 절차

학교폭력에 대한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신청 → 분쟁조정 개시 →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분쟁조정 → 분쟁조정 종료 → 분쟁조정 결과처리” 순으로 그 절차가 진행된다.

1)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당해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법 제18조)에게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②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③ 신청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 법시행령 제12조).

2) 분쟁조정의 개시와 통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 1항). 그러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③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5조 1항).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①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②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5조 3항).

3) 분쟁조정(심의)

통보된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에서 분쟁조정이 진행된다. 분쟁조정에는 ①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②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며(법 제18조 3항),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법 제18조 2항).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 제18조 4항).

(가) 분쟁당사자 출석과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과정에서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 3항).

그리고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척·기피·회피가 인정된다. 즉,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②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③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법 제13조 1항). 그리고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13조 2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의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법시행령 제13조 4항)

(나) 분쟁조정의 중지

① 분쟁조정의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③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5조 1항).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15조 3항).

4) 분쟁조정 종료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①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②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5조 2항).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5조 3항).

5)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①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②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및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 ③ 조정의 결과 등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이, 교육감이 조정 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6조 2항).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학교의 장)은 분쟁조정 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

6) 관할권

시·도 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고(법 제18조 6항),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법 제18조 7항).

2.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가. 학습권 보장의 문제 :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16조 제4항). 보호조치는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일시 보호조치를 위한 요양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피해학생 및 학부모나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 등이 필요하며, 피해학생이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에 대해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 관한법률 법률 제 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성권을 행사하므로(법 제16조 5항) 가해학생가해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일이 더 걸리게 된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면 피해학생의 치료·요양에 필요한 비용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다. 불안한 지위에서의 조기해방

학교폭력 가해자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하·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경우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또는 징계책임에서 조기에 해방되는 것이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을 위한 정신감정의 어려움

민사재판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폐쇄 병동에 갇혀 치료하던 약물도 중지해야 하며, 책도 볼 수 없고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들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자기 자식을 이런 고통 속에 다시 몰아넣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마.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 대립의 격화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사과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가해학생을 두둔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을 기화로 손해배상금을 단단히 한 몫 챙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주위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아이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학교폭력으로까지 번졌는데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가해 학생을 찾아가 억박지르고 학교를 찾아가 피해상황을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서로 감정적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중재나 조정에 의하여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면 지루한 법정 공방과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도 조기에 소송절차에서 해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 교사 및 학교운영자의 민사상·국가배상법상 책임문제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하고,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한다.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는 여론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며, 학생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거나 훈계를 하는 데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 정리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대상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호조치는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일시 보호조치를 위한 요양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평가하기

문제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상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2) 분쟁의 조정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 (3)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사항을 포함한다.
- (4)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해설 : 정답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문제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 상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4)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할 수는 있으나, 비밀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4)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문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없다.

(3)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4)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